

文대통령 “이인영·박지원, 멈춘 남북관계 움직임 소명 있어”

박지원 “남북관계 물꼬 트고 국정원 흑역사 청산 개혁 보답”

이인영 “한 걸음씩 전진, 대통령 재임 중 평화 숨결 실감토록”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인영 통일부장관·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 관계를 움직이는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이어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

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사상 처음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며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장관에게는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은 역사적 소

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라면서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 국정원·통일부·외교부·국방부·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원장은 “저를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정치 게임의 흑역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평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며 “한 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에 평화의 숨결만큼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여야, 부동산법 강행 처리 놓고 국토위 초반부터 설전

전날 국토위서 민주당, 전월세신고제 등 일방 처리 통합당 “임대차3법 때문에 아우성...의원이 거수기냐” 민주당 “7월에 처리 안되면 11월에야...부득이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 처리를 놓고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전날 국토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조속한 입법을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조차 안된 상태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의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통합당 간사인 이현승 의원은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22번이나 나왔지만 다 실패했는데 지난 3년간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급하다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려 했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며 “우리당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 통과가 됐는데 보니깐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정도로 깊이 있게 법안이 논의

가 됐는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법안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안정된 것이 아니고 더 들쭉이 있다”며 “임대차3법을 실시하겠다고 하니 임차인은 임차안대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매물이 없어서 난리이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이 소위원회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상임위별 안건 처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소위 구성 없이 논란이 되는 법안들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깨고 수적인 우세를 빌미로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일이다. 이에 대해 위원장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어제 국토위 일정이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부동산은 심리가 크게 좌우한다.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입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구호에 불과한 대책이 된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들어가서 빨라야 11월께가 돼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하고 이는 그대로 민생과 국가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급박한 사유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주 동안 통합당 간사와 함께 업무보고부터 받고 소위 구성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밀리고 밀려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다소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에 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의

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의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 국민과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도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거수기였다는 것이냐”고 따져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진 위원장은 “이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저는 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합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진 위원장은 “법안심사의 권한은 원래 전체회의에 있는 것”이라며 “다만 조금 더 다양하고 깊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임할 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급박한 법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검언유착의 본질, 수뇌부 일부 ‘자기편 챙기기’가 전체 신뢰 추락시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국성갑)은 “검찰 내 수뇌부의 일부 검사들이 자기 편 챙기기에 매몰된 탓에 검찰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열린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소병철 의원은, 지금 검찰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관련하여 “검찰 전체가 아니라 검찰의 일부 검사들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도 수많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진 위원장은 “이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저는 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합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진 위원장은 “법안심사의 권한은 원래 전체회의에 있는 것”이라며 “다만 조금 더 다양하고 깊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임할 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급박한 법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 의원은 “‘검찰 일부’의 자기 편 챙기기로 인한 능력수사

행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전체’의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검찰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내 해결방안이 없으니 장관께서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도 “기관장끼리의 견대립이 아니라 수사팀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상급청에 요구한 것이고,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수사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총장이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일청에서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상급청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필요할 때에는 명시적 규정 없이 검찰청법에 따라 다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의 수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검사 수뇌부가 일선 검사들을 만지 못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통탄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부터 개혁의 주체가 되어 이런 관행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